

‘13조+α’ 추경의 추억, 성장 마중물 역할할까

(추가경정예산)

위기의 韓 경제

“13조 추경, 조기편성·집행땐
올 성장률 0.15%p 제고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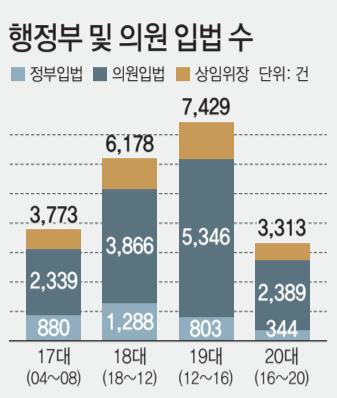
한국경제가 위기라는데 이견은 없다. 실망만 하다가는 더 큰수렁에 빠질 수 있다. 재계 최고경영자(CEO)가 뛰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빅 퍼처(Big Picture)’다. 세계 각국은 4차산업혁명을 리드할 빅 퍼처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장을 중심으로 ‘빅 퍼처’를 그릴 조기 추경편성 예산 편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다만 정책 공조와 규제 개혁을 통한 극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추경편성할 돈? ‘13조 +알파(α)’

시장을 중심으로 추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경제를 살릴 ‘희망의 불씨’로 보고 있는 것.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2018년 세입세출마감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을 쓰고 남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조7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분(10조5000억원)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보내야 해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상 없다.

하지만 2015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보면 성격이 다르다.

2016년과 2017년 추경 재원은 세수 임여 9조8000억원과 예상 초과세입 8조8000억원으로 대부분 충당했다. 세계잉여금도 8조원에서 10조원에 달했지만,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에 평균적으로 40%를 지급하고, 채무상환으로 30% 이상을 썼다

시장에서는 ‘13조 +알파(α)’를 책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근거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수준을 고려한다면 세입 초과분 13조7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아 올해로 이월된 3조3000억원을 뺀 순수 세계잉여

금은 13조2000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 10조7000억원의 30% 가량인 3조원을 더 쓸 여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KB증권 문정희 연구원은 “초과 세수 등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최소 규모는 13조7000억원, 세계잉여금이나 기금자금 등이 포함될 경우 ‘13조원+ α’ 수준이 예상된다. 2019년 국내 실물경기 부진, 고용 위축,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등을 감안하면 2016~2017년의 11조원을 웃도는 추경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딴지 거는 측에서는 추경편성 때마다 정부 무능을 얘기한다. 하지만 글로벌 무역전쟁과 산업 경쟁력이 뚝 떨어진 상황

에서 희망의 불씨가 절실히라는 게 시장의 지적이다.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예상대로 추경이 13조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편성된다면 경제적 효과는 0.3% 포인트 가량이다. 2018년 명목GDP 1800조원(예상)의 0.7%(추경), 평균 재정승수 0.45를 감안해 나온 결과다. 문연구원은 “추경의 조기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다면 2019년 연간 성장을 개선효과는 0.15%포인트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정책공조와 기업 빅장 함께 풀어야 효과

추경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통화정책(금리)이란 정책공조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1차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한다. 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소비, 투자 등 내수 위축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2.6% 성장률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금리인상으로 정책공조가 흔들린다면 기업들의 투자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비투자(-1.7%)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9년(-7.7%) 이후 가장 낮았다. 건설투자(-4.7%)

0%)의 경우 외환위기 여파를 입은 1998년(-13.3%) 이후 가장 낮아 2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지난 11일 정부는 도심 수소충전소 등을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했다. 재계는 “규제개혁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다. 하지만 길은 멀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지난해 경총포럼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고 경영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는 규제가 여전히 너무 많다. 국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업종이나 산업에 있어서는 최소한 국제적 기준에 비슷한 규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도 투자 활력을 위한 규제 완화를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업체 모니터링에 의뢰해 19세 이상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할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25.2%)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20.5%), 노동유연성 확대(16.7%)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성화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목표 15만개 달성 총력”

홍남기 부총리, 경제활성화 대책회의
“취업자 ‘한자리수 증가’에 책임감”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 결과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성화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여건개선에 두고 활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월 실업률이 4.5%로 1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아진 것과 관련해 “올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실업률 상승에는 고령층 실업자 증가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또 제조업 취업자 수가 17만명 줄

어든 것과 관련해 “여러 경기 구조적인 문제와 투자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민간 투자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000명은 착실히 추진하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 달까지 확충하겠다”며 “신규채용 인력 2만5000명은 모두 정규직”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홍 부총리는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20건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심의를 끝내고,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 내 경제주체 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부진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추경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재정을 조기 집행해 민간 활력을 제고하는 등 기존에 밝힌 정책을 집행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한진, 지배구조 개선 ‘투명경영’ 선언

그룹비전 2023 발표

그룹 매출 22조, 영업이익률 10% 추진
사외이사 3→4인 확대, 감사제도 설치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이 송현동 부지(3만6642m²) 연내 매각 추진을 포함한 향후 5개년 중장기 ‘한진그룹 비전 2023’을 발표했다. 이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포함이다.

한진칼은 2018년 예상 그룹 매출 16조 5000억원을 오는 2023년까지 2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영업이익률은 10.0%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전을 13일 발표했다.

특히 경영 선진화를 기반으로 항공운송, 종합물류, 호텔·레저 분야의 사업 집중과 수익성 확대를 꾀하는 한편,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진그룹은 항공운송, 종합물류, 호텔·레저 사업에 집중해 오는 2023년까지 그룹 전체 매출을 22조원에 10.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는 2018년 그룹 예상 매출 16조5000억원 대비 연평균 성장률은 6.2%, 영업이익률은 2018년 예상 수치인 6.1%에서 10.0%로 확대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운송 부문에서는 신형 항공기 투자, 신규노선 확대, 조인트벤처 협력 및 항공사간 제휴 확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물류 부문에서는 생산능력 및 고객 네트워크 확대를, 호텔·레저 부문에서는 항공운송 부문과 연계 영업 강화, 운영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진그룹은 IT 및 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역량을 높여 주력 사업에 대한 지원 체제도 강화하는 한편 각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도 대폭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비전 달성을 위해 한진칼은 주주 중시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2018년 당기순이익의 50% 수준을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현금 유보,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배당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주요 상장사와 공동으로 한진그룹 IR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룹 주요 경영 성과 및 계획을 조기에 공시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한진그룹은 송현동 부지를 상세한 일정과 방안을 마련, 연내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파라다이스 호텔의 경우 우선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 서귀포 카호텔과 연계한 고급 휴양 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진그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를 늘리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한진칼의 경우 사외이사를 현재 3인에서 4인으로 늘려 7인 이사회 체제로 운영한다. 또한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내 사외이사 후보주천위원회도 설치한다. 주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또한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한 경영시스템을 추가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한진칼 및 쿠한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다. 특히 한진칼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명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진칼은 회계 조직과 별개로 내부회계관리를 운영하는 조직과 이를 감독하는 조직을 각각 설치한다. 이미 지난 해 8월부터 운영한 그룹 차원의 자문 기관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도 활성화 시켜 공정거래 및 상법 준수,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는 한편 임직원간 소통 활성화 및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선다.

/양성운 기자 ysw@

“개인정보법 입법… 소비자 혜택 줘야”

최종구, ‘신용정보법’ 조속처리 요청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 강화구제에 만족점을 맞춰 정보의 활용 부분을 업그레이드 제한하는 사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은 이미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를 빠르게 정비했다. 우리나라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혜택은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

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경제가 활성화하면 금융상품과 서비스는 금융사 위주가 아닌 소비자 위주로 바뀔 것”이라며 “회일적인 금융상품은 사라지고 개인 선호와 위험성, 신용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